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

즐거운 노년 만드는 ‘할머니 배구단’

가자세로 균형감각을 다진다. 아무리 추워도 코트를 잔뜩 꺼입고 실내 운동장까지 뿔뿔히 타고 가서 공을 주고받는 모습은 나이 들기의 유쾌함을 가르쳐준다.

‘낙천주의자’라는 팀 이름처럼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며 따로 또 같이 인생길을 가는 이들은 활력을 위해 대결할 팀을 구급원으로 찾아낸다. 도전에 응한 상태는 ‘힘찬 사내들(The Power Guys)’이란 스웨덴 노인 남자 배구단이다.

졸지에 남녀 대결 국제대회를 치르게 된 낙천적인 배구단은 지역 은행에 찾아가 스폰서를 얻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청소년 운동 시설 같은 고정적인 것을 지원한다는 은행 간부의 말에 선수복 지원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기지를 발휘하여 지원금을 따내기도 한다.

해서 뜨개질을 해온 고로 왕언니는 손뜨개로 꽃모양 팀 문양을 만들어 스웨덴 행 버스 안에서 나눠준다. 처음으로 만든 파란색 선수복 상의에 각자 바느질로 팀 문양을 다는 버스풍경은 정겹기만 하다. 선수복 등에 붙은 번호는 선수들 나이다. 88번, 98번, 66번 등... 두서없는 번호는 안티 에이징 상품에 눈민 젊음 중독 세상을 탈주하는 아우라마저 느끼게 해준다.

평균 연령이 더 높은 이웃 나라 언니들의 도전을 받은 스웨덴 ‘힘찬 사내들’도

활력을 얻으며 힘 기르기에 매진한다. 남녀 혼성 경기이기에 여성 신장에 맞춰 네트 높이를 낮추고, 레이드를 대접하는 서구 문화 기사도를 발휘하기도 한다. 힘과 기술에서 밀린다고 판단한 낙천적인 언니 팀은 ‘웃음’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양 팀 합쳐 최고령인 98세 고로 선수는 자기가 뛰면 질 것이라는 압박을 피우면서 서도 코트에 나가 뛰어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인기도 누린다. 더 젊은 남자팀에게 졌지만, 서로 손잡고 댄스파티로 운동장을 누비는 이들의 배구시합 에필로그는 ‘낙천주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팀을 회고하는 10주년 기념사전에 등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주로 암이나 치매로 세상을 떠났지만, 공놀이하며 나이 들기에 합류한 또 다른 언니들이 들어오면서 배구팀은 오늘도 돌아간다.

유튜브에서도 인기있는 ‘할머니 배구단’ 트레일러와 이미지들은 노년 인생길의 즐거움을 가르쳐준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노인 복지도 지나간 노년기를 나누는 할머니 배구단은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해준다. 같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자”며 당장 공놀이를 만들자는 열정을 토로한다. “저런 공

동체는 국자 차원의 복지가 잘 된 북유럽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누군가 김을 빼기도 한다.

반드시 그런 것일까? 민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인디 영화가 존재하듯이 인디 공동체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세월호를 안고 아픈게 가는 ‘한국호’가 고령사회로 빨리 접어드는 중이라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한국호는 4년 후인 2018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프랑스는 115년, 영국은 91년, 미국은 88년, 일본은 36년 걸렸는데,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으니 빨리빨리 목표 달성이라는 관심이 발휘되는 셈이다. 그런 추세로부터 탈주하는 인디 공동체 생성이 이 가을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뜻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줄 나눠주고 싶습니다.”

안도현의 시 <가을엽서>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앉으며 연대하는 즐거운 공동체를 청량한 가을 하늘 구름처럼 띄워본다.

NGO 칼럼



장민희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출판사업팀장

책을 만든다는 것은

실력 있는 편집자, 수십 년의 영업 노하우를 가진 마케터, 많은 저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내주어서 지난해 10월 ‘중국 고전우화’를 시작으로 ‘지혜를 찾는 교육’, ‘낭독은 입문학이다’, ‘관우’, ‘말리거나 혹은 떨리거나’까지 총 다섯 권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어렵게 세상에 나온 이 책들은 각종 매스컴과 기관에서 좋은 평을 받고 소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의 현실은 냉혹했다.

‘낭독은 입문학이다’의 경우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되고, 각종 도서관련 기관에서 우수 권장도서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낭독은 입문학이다’는 대형 출판사가 출간하는 책의 평균 조판 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출판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단순히 출판업계의 불황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출판업계의 불황은 독자의 잘못이 아니라 출판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전자책이 유행하면서 출판업의 유통구조가 변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형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독점적 유통구조가 형성되면서 지방의 중소서점들은 규모가 작아지거나 문을 닫았다. 접미가경으로 저가 판매 전략을 내세운 대형 인터넷 서

점으로 인해 출판사들은 원가수준의 책 출고를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출판사의 배리다매 할 수 있는 책을 만든다. 독자가 책을 읽고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로만 끝나버리는 책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독자들에게 많이 팔린 책이 좋은 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출판사들은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책을 많이 팔기 위한 고민을 더 하는 것 같다.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들여서 책을 사재기하는 출판사, 똑같은 내용을 순서만 바꿔 자기개발서를 만드는 출판사,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무조건 책으로 만드는 출판사를 보면서 요즘 출판이라는 것이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독자는 책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와 의미들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나 책 사재기에 대한 논란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출판사,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펼치는 저자, 좋은 책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는

독자의 신뢰 관계 회복이 관건이다.

철학교육연구소의 출판사는 평생 동안 현장에서 대안교육을 고민했던 여느 대안학교 교장의 교육철학이 담긴 이야기, 낭독운동을 펼치고 있는 재아의 낭독활동기가 쓴 낭독 체험기, 중국고전우화를 청소년들이 읽기 쉽게 풀어 쓴 이야기, 서평기의 책과 함께 한 진솔한 여행담, 중국의 실제 역사 속의 관우를 보여주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신뢰 관계를 지향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는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외국의 출판사가 한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그 지역의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발견하고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출판사의 지역 기반은 서울·파주라는 공간에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출판사가 지역과 다양한 이야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주류의 이야기들만을 고민한다는 반증이다.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한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알려지지 않은 가치를 지역과 만들고 찾아가야 할 것이다.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산하 ‘현자의 마을’은 이름처럼 저자와 독자가 광주의 정신평화를 발견해내고 그 과정에서 지혜로움을 함께 추구하는 출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고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행복연구실장

해상풍력 활성화,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지에서는 해상풍력을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판단,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과 ‘전라남도 5GW 풍력프로젝트(육상 1GW, 해상 4GW)’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해상풍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국내 경쟁력이 가장 탁월한 분야로 산업의 고도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추진의지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내에서 해상풍력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기 위해서 유럽과 같이 향후 10년 이상의 국가적 계획, 즉, 중·장기적 해상풍력 확대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계획’,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부문에서 최소한 13.6GW 내외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서남해 2.5GW 해상풍력개발사업과 전남의 4GW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국가 해상풍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 개발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해상풍력 추가로드맵에 전남의 4GW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의 서남해 2.5GW 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전남 4GW 프로젝트를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해상풍력추진단에서 전남의 4GW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해상풍력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전력계통 연계 비용의 정부지원 방안과 환경영향 최소화, 간접적 어업권 피해보상, 해상풍력 관련법 제정·정비 등 법·제도적인 개선과 덴마크처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투자경쟁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발업체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 특례제한법 제2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감면규모는 기존 생산시설 세액공제에 사업개발 비용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지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일률적인 지원(100억원)보다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풍력 공급인정서

(REC) 가중치를 10~15km는 3.5점, 1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을 부여하는 등 연계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상풍력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지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징은 정부정책에 특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해상풍력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보다는 정부정책이 시장 수요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영토확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 원별 균형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사업 활성화, 기술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저탄소 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성 증대, 이산화탄소 채집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해상풍력의 상용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안전사각지대’ 유람선 이대로 방치할 건가

지난달 30일 흥도 앞바다 유람선 좌초 사고 이후 또다시 선박 안전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이 안전을 강조했지만 아직도 말의 성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분노 취재에 따르면 여수 등 관광지 운영을 하는 유람선에는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선사들이 신변증 확인은 뒷전이고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기 일췌였다고 한다. 운항도 탑승객의 숫자가 차야 출발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배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은 관광해설에만 몰두해 위급시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고시 생명줄과도 같은 구명조끼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승객의 안전을 도울 선원도 법규정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유람선들이 안전을 무시한 채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해경과 관계당국은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승객 안전관리기 선사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람선 관련 법과 허가·안전관리기 소방방재청과 해경, 지자체로 나눠져 있어 통합관리기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유람선 대책을 넣지 않은 여처구니 없는 행태에서 비롯됐다.

7일 경찰이 발표한 흥도 유람선 사고 원인도 선장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다. 이렇듯 유람선 안전을 책임질 선사와 선원, 관리당국이 승객 안전을 중태에 없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람선 관광객은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한다.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대형 참사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시한 채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해경과 관계당국은 현장에서 찾아 볼

학교 안전사고 느는데 예산은 쥐꼬리라니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의 학교 안전교육 예산은 학생 1인당 2000원 안팎에 불과해 ‘안전’이 허투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에서부터 안전교육이 생활화돼야 하는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면서 사학도 도처에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5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9년 2150건에서 2010년 2447건, 2011년 2629건, 2012년 3441건, 지난해 341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4년 새 안전사고 증가율은 무려 7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학교 안전사고도 2009년 1540건에서 2013년 1940건으로 늘어 나면서 증가율이 45.8%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안전교육 예

산은 2013년 1416원, 올해 1490원에 불과했고 전남지역은 지난해 4874원에서 금년에는 26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학교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안전교육 예산이 ‘쥐꼬리’에 불과하다니 정부와 교육당국의 안전 의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선진국처럼 안전교육과 안전의식은 학교에서 비롯되고 각인시키도록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이를 간과하고 방치한 데 있다. 또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늘 노출돼 있다. 학교 건물도 노후화된 곳이 많아 위험이 상존해 있다.

위험과 교육당국은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때부터 안전의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p>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태평양전쟁을 끝낸 미국의 최대 고민은 일본의 천황제 존속 여부였다.</p> <p>전쟁 피해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천황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근간이 천황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황을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서, 전쟁 책임을 물어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p> <p>반면 일본 국민들은 천황없는 국가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쟁 직후인 1945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천황제를 지지하는 국민이 95%에 달했다. 당시 수상 시메하라 기주로는 “천황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다.</p> <p>고민에 빠진 미국은 연합국 사령관 맥아더의 현지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천황의 위력을 직접 목격한 맥아더는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하면 100만명의 군대를 재투입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기밀전문을 미국에 보냈다.</p> <p>결국 미국은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기소하거나 퇴위시키지 않고 천황제를</p>	<p>존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1946년 헌법을 만들면서 제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을 명기했다.</p> <p>10일 발표 예정인 노벨평화상 0순위 후보자로 ‘일본 헌법 9조’가 올랐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조항을 지키는 일본 국민’이다.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가 공개한 예측 리스트를 보면 278명의 개인 및 단체 후보 가운데 일본 헌법 9조가 1위를 차지했다.</p> <p>여기에는 가나가와 현의 전입주부인 다카 나오미씨의 이름이 컸다. 20대 시절 호주에서 유학한 그녀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있는 것이 평화헌법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결성했고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들였다.</p> <p>다카씨는 만약 노벨상을 받는다면 아내 총리가 일본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한다고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 등 정치적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를 노르웨이로 보내는데 한 표를 던진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p>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500)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15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디지털뉴스팀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55 (F A X 02-773-9331)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